

국가란 무엇인가

1. 국가란 무엇인가
2. 개인의 올바름과 국가의 올바름



■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는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접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주로 '용산 참사'라 불린다.(위키백과)

용산참사에 대한 반응은 크게 보아 네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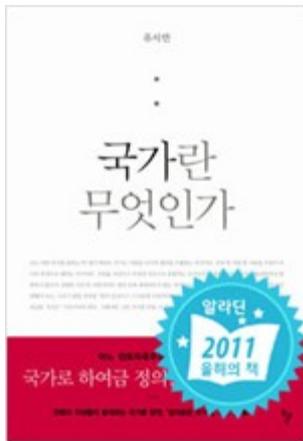
(1) 국가가 할 일을 했다. “농성자들의 폭력은 불특정 다수,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심 테러행위로 볼 수 있다.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시설불법점거, 난동 등 주요 범죄를 예방, 진압하는 것이다.”

(2)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남일당 빌딩 농성은 개발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벌어진, 건설 회사와 재개발조합을 한편으로 하고 세입자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집단적 이익분쟁이었다. 민간의 이익분쟁에 곧바로 뛰어들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3) 국가가 원래 그런 것이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으로 사랑하는 가족마저 저세상으로 보낸 철거민을 향해 거침없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의 행태는, 국가란 곧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자들의 기득권 강화와 유지를 위한 도구이자 수단임을 거듭 일깨운다.”

(4)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세권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위태롭게 하면서 재개발조합과 건설업체의 이익을 편향되게 보호하는 법률 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전세권자에게만 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법의 지배’가 될 수 없다.” 국가의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시민을 공정하게 대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해명하는 철학과 이론은 몇 가지 큰 흐름으로 갈래를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의 논리체계를 처음으로 분명히 세운 인물은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였다. 둘째는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존 로크에서 애덤 스미스를 거쳐 하이에크까지 소위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이 이론을 만들었다. 셋째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다. 마르크스가 창안한 이 이론은 150여 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진보주의자들을 끌어당겼다. 넷째는 목적론적 국가론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쳤던 가장 오래된 이론이다.

▷국가주의 국가론: 홉스는 <리바이어던>(1651)에서 ‘사회계약’을 국가의 기원으로 보는 이론을 세웠다. 홉스의 국가론을 한마디로 줄이면,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홉스의 대답은 명확하다.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그는 국가의 합법적 폭력에 무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홉스가 보기에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

쟁상태’ 또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상태’이다. 자연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국가를 창조하는 것뿐이다. 자연상태의 불안하고 고독하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공동의 권력을 세우는 것이다. 홉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연법적 권리를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함으로써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되는 것이 곧 국가라고 하는 위대한 리바이어던의 탄생이다. 그렇다면 누가 주권자가 되는가? 정복을 통해 복종을 강요하거나 합의에 의해 자발적 복종을 끌어내는 사람, 그가 주권자가 된다. 현실에서 주권자는 곧 왕,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전제군주를 말한다. 홉스에게는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고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형태였다.

홉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흔하게 있다. 소말리아의 경우, 소말리아 무장반군은 1991년 포악한 독재를 자행하던 군사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반군 지도자들 사이의 권력투쟁 때문에 혁명은 곧장 내전으로 변졌다. 크고 작은 파벌과 부족들이 벌인 무력투쟁과 집단학살, 강간, 약탈행위가 난무하는 가운데 소말리아 국민들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인구 1,000만 명 정도인 이 나라에서 내전 발생 이후 20년 동안 4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70만 명이 소말리아를 탈출해 국제난민이 되었다. 나라 안에서 떠도는 난민도 140만 명이나 된다. 소말리아의 근본문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말리아의 상황은 국가 없이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홉스의 이론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마키아벨리(<군주론>)의 조언에 따르면 현명한 군주는 언제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 군주는 꼭 덕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덕을 갖춘 것처럼 보여야 한다. 신민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잔인하다는 평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홉스의 국가론과 마키아벨리의 통치술은 잘 어울리는 이론서와 매뉴얼이다. 홉스의 국가론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마키아벨리의 통치술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의 목적을 오직 하나로 규정한다.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이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인 공포감, 무질서와 범죄 또는 외부의 침략에 대한 본능적 공포감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림 교수는 대한민국의 기원을 한국전쟁에서 찾았다. 홉스의 이론에 맞닿아 있는 시각이다. 무려

500만 명이 죽고 사라지고 다쳤던 동족상잔의 이 전쟁을 우리는 ‘6·25’나 ‘한국전쟁’이라고 부른다. 그토록 짧은 기간에 이렇게 좁은 영토에서 것처럼 많은 인명이 살상당한 전쟁은 근대 이후 거의 없었다. 한국전쟁은 다른 어떤 전쟁보다도 민간인 살상이 많았다. 국민들이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이후 최대 사건으로 꼽는 것은 여전히 단연 ‘한국전쟁’이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피바람을 마시면서 성장했다. 국가기구가 팽창하고 반공주의가 강화됐다. 10만 남짓하던 군대는 전쟁을 거치면서 60만이 넘는 대군으로 성장했고 경찰의 규모도 단기간에 5만 명을 넘겼다. 사회경제적 발전단계를 고려하면 지나친 규모였다. 이것이 전쟁 이후 정치의 틀을 결정지었다.

1961년 군사쿠데타와 뒤이은 30년간의 군부 권위주의 통치는 분단과 전쟁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지나간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적 분화를 거치면서 상비군과 관료제가 발전하고 국가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길게는 8년, 짧게는 3년에 불과했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졌다. 우리의 국가는 시민사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도전을 파괴하면서 밖에서 주어진 다음 단기간에 급팽창하는 형태로 구축되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발생사는 홉스의 국가론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철학적으로는 홉스를, 통치기술로는 마키아벨리를 추종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평등권과 노동권은 법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통치권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 위협과 북괴의 지령을 받는 친북용공세력이 야기하는 내부적 혼란’에 대한 실제적인 또는 조작된 대중의 공포감을 이용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했다. 이런 공포감은 21세기 첫 10년이 다 지나간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의 의식 저변에 짙게 배어 있다.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질서유지와 국가안전보장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을 신봉하는 이들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국가는 그 정도 힘을 가져야 마땅하다.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철거민들의 거리시위는 물대포를 쏘고 헬기를 동원해서라도 강력 진압해야 한다. 해고 노동자와 철거민들의 처지는 이해가 되지만 질서파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답지 못하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사람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믿는다... 이 모든 생각들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이를 따르는 사람과 정치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이념형 보수’가 적당할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론: 전제군주제 국가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했던 국가주의 국가론이 입헌군주제나 공화제를 꿈꾼 자유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한 것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사태였다. 이 사상적 도전을 현실의 승리로 전화하는 데 기여한 철학자와 정치가는 숏하게 많지만, 대표적인 철학자로 존 로크,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크는 사회계약을 어느 한 사람이나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다수파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수파의 대표로서 최고 권력인 국가의 입법권을 장악한 사람은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지고 항구적으로 확립된 법률에 의거하여 통치해야 한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로크가 <시민정부론>에서 펼친 이론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국가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는 매우 독창적이었다. 그는 경제이론으로 국가를 조명했다. 국가는 '세속의 신'이 아니라 특별한 성질을 가진 하나의 경제주체에 불과하다. 스미스는 국가의 의무를 세 가지로 한정했다. (1)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그 사회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것은 군사력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2)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하는 것, 다시 말해 재판의 엄정한 시행을 확립하는 의무이다. (3)사회 전체의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어떤 개인 또는 수수의 개인들에게 그 비용을 보상해줄 수 없고, 따라서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이 그것을 건설하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닌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의무이다.

일반적인 치안 서비스와 국방 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국방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스미스가 인정한 국가의 의무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 단 한 가지뿐이다. 국가는 세속의 신이 아니라 공공재 공급자에 불과하다. 보수정치인이나 경제학자, 기업연구소 박사들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이것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할 때, 그들이 마음속으로 경배하는 수호성인은 바로 애덤 스미스이다. 그런데 스미스의 의도와 달리 국가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진보주의자들도 '공공재'에 대한 그의 이론을 적극 활용한다. 스미스는 이 둘 모두를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밀은 <자유론>을 통해서 자유주의 국가이론을 철학적으로 완성했다. 밀은 자유의 기본영역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다. 둘째는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이다. 셋째는 결사의 자유이다. 진정 자유로운 사회에서라면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법으로, 자유의 이 세 가지 기본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아직은 진정 자유로운 사회라고 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밀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이 조항의 전반부는 존 로크를 비롯한 자유주의자 일반의 소신이었다. 그러나 후반부 선언의 지적 소유권은 밀에게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작은 국가, 작은 정부를 좋아한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사는 방식도 나 스스로 결정할 터이니,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도 내 삶에 간섭하거나 내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는 되도록 적게 책임지고, 시민 각자가 자유에 상응하는 삶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데이비드 소로는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글에서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는 표어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국가에 대한 소로의 생각은 단순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평화주의와 생태주의 등 더 넓고 다양한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정부였다는 점에서, 그의 국가론은 분명한 자유주의적 색조를 띠고 있었다.

자유주의 국가론은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를 경제적·정치적 기본질서로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았다. 이를 신봉하는 사람과 정치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시장형 보수’가 적당할 것이다(이 세력이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정당과 두 번째로 강력한 정당 안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가장 강력한 정당에서는 아직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두 번째로 강력한 정당에서는 견고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집단주의와 독재에 단호히 반대한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는 찬성한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오래 살아남겠지만 사회적·기술적 분업이 더욱 진전되고 정보통신기술과 지식혁명이 더 진전됨에 따라 그 기반이 조금씩 축소되어 갈 것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이 위축되면서 생기는 담론시장의 공백을 채울 다른 유력한 국가론이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담론은 자유주의 국가론뿐이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었고 자유주의 국가론은 국가보다 개인을 중시한다. 주장은 다르지만 국가를 하나의 공동사회로 본다는 점에서 이 둘은 같은 철학적 기초 위에서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국가를 하나의 공동사회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는 만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국가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홉스부터 루소까지, 마르크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제시한 모든 국가론은 일거에 논리적 근거를 상실한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도구적 국가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만인을 위한 공동사회가 아니라 계급지배의 착취도구에 불과하다면, 국가에 대한 귀속감이나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애국심은, 적어도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헛된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옳다면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들에게 없는 것을 빼앗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토대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임금노동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이다. 국가는 이 생산관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법률적·정치적 상부구조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는 주기적인 산업공황과 노동대중의 궁핍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회혁명,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계급의 존재와 적대적인 계급대립 그 자체를 철폐하는 마지막 사회혁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혁명의 주체는 자본주의 체제의 피억압 대중인 프롤레타리아트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마르크스 자신의 계급적 호불호와 무관한, 역사법칙에 따른 필연적 사회혁명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그 자체가 소멸의 길로 들어선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자본가 개인에게서 '연합된 개인'인 사회로 이전하면, 계급의 차이가 사라지고 국가권력도 정치적 성격을 상실한다. 마르크스는 '빅 브라더'나 철학자, 가장 지혜로운 자, 또는 어떤 선택된 계급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원하지 않았다. 그가 꿈꾸었던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였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연적이고 정치행위가 그 혁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정치란 아무 의미 없는 권력투쟁에 불과하다. 정치를 하기 위한 정당은 필요 없다. 만약 정당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회혁명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레닌의 볼셰비키당이 바로 이런 정당이었다. 마르크스

는 어떻게 하면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국가권력을 탈취한 이후 어떻게 사회를 재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직후 레닌이 깨달은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는 실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레닌이 “이런 문제를 취급하는 사회주의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레닌이 실시한 소위 신경제정책(NEP)과 5개년 계획은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과 아무 관계가 없다. 마르크스의 저술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사회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배분되는 사회로”라는, 아무 소용없는 슬로건 말고는 사회주의 경제에 관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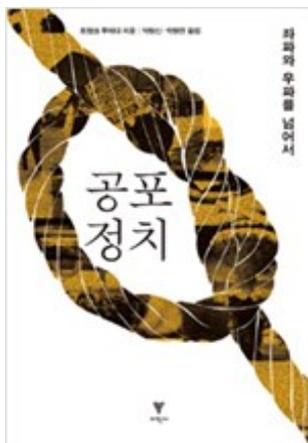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심각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정치무용론과 정치적 냉소주의이다. 진보진영에서 한때 크게 유행했던 ‘노명박’이란 표현, 자유주의자와 국가주의자를 한 묶음에 넣어버리는 이 ‘진보적 수사법’의 배후에는 좌절된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 놓여 있다. 이 표현이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반(反)신자유주의 투쟁이라는 말은 반(反)자본주의 투쟁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한 ‘착취당하는 고통’(혹은 ‘취당하지 못하는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진리’를 전파하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한다. 본성이 계급지배의 도구인 국가더러 지배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적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상하지만,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빛을 잃은 시대인 만큼 서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간다.

▷복지국가론: 복지국가론은 철학 차원의 국가론이 아니다. 선을 행하는 국가의 한 현상형태, 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합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의 결별을 내포하며, 그런 면에서 진보정치세력의 사상적·실천적 발전을 반영한다. 지배계급의 도구에 불과한 국가로 하여금 대중의 복지를 실현하게 한다는 것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추어 보면 터무니없이 유치하고 낭만적인 발상이다. 국가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론으로도,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선을 실현하게 하는 복지국가론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결국 복지국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연중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의 결합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안보국가->발전국가->민주국가->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주요 기능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국가의 규제를 통해 일정한 수준에서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징수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일이다. 셋째, 시장가격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와 공동장비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흔히 복지국가론이 진보 주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국가론도 완전하게 배척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제도를 보면 사회적 연대를 구현하는 복지정책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사회보험, (2)공적 부조, (3)보편 서비스.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보편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고 평등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우리 모두는 국가 안에서 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산다. 국가를 떠나서는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시민의 삶도 훌륭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도 국가를 대신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국가가 필요하다(후쿠야마, <강한 국가의 조건>).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할 능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이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다. 공화국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것과 똑같은 무게의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 존엄한 존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아는 시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면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 타인과 연대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이 훌륭한 국가를 만든다.



■ 겹주고 겹먹는 정치

(시사IN, 13. 04. 13)

영국 사회학자 프랭크 푸레디의 <공포 정치>(이학사)는 영화에 관한 책이어도 그럴 듯했겠다. 공포영화를 즐기지 않는 나도 몇 번 본 기억이 있지만, 1980년대 공포영화의 고전 <나이트메어> 시리즈의 아이콘이 흉측한 얼굴에 증절모를 쓰고 칼날이 달린 장갑을 휘두르는 프레디 크루거였잖은가. 그런 공포영화의 정치학을 다룬 책에 ‘공포정치’란 제목이 붙었어도 어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공포

정치〉는 그런 스틸감과는 거리가 멀다.

저자가 제시하려는 건 우리시대 정치 문화의 특징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다. “공포 정치가 서구 사회의 공적 생활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서로를 겁주고 또 겁먹은 것처럼 보이는 데 매우 능숙해졌다.”는 진단이 책의 서두다. 요즘처럼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당장에라도 핵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는 정황에도 딱 들어맞지만, 저자가 염두에 둔 건 10년쯤 전 상황이다(원저는 2005년에 나왔다). 200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것이 배경이다. 9.11 테러 이후에 공포 정치가 미국의 공적 생활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됐고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부시의 재선을 가능하게 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공중의 안전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 건 부시 진영만이 아니었다. 공포 서사는 케리의 선거운동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었다. 민주당원들은 부시를 두려워해야 할 인물로 변형시키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미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공포 정치의 이용에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따로 구별되지 않았다. 차이라면 공화당의 보수주의자들이 테러의 위협을 단골 레퍼토리로 써먹은 데 비해서 민주당이나 급진주의자들은 조류독감 같은 걸 활용했다는 것 정도다. 한쪽에서는 전쟁과 테러의 위협을 떠들어대고 다른 쪽에서는 신종 독감이 4000만에서 4억명에 이르는 미국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업포를 놓았다. 모두가 ‘겁주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그러한 공포정치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의 부제가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인 것은 그 때문이다.

프랭크 푸레디가 전작 〈우리는 왜 공포에 빠지는가〉(이학사)에서 주장한 대로 공포는 현재 공중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다. 공포 정치는 공포 문화를 내면화한 것이기에 그 극복은 간단치 않다. 공포 문화는 인본주의와는 달리 인간이 취약하다는 의식을 주입한다. 우리가 ‘성숙한 시민’이 아니라 ‘취약한 개인’에 불과하다면 주어진 운명을 부정하는 본연의 정치란 가능하지 않다. 정치의 쇠퇴와 고갈이 이러한 취약성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문제의식이다. 이 패러다임에서 공중은 점점 유아화된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여 등장하는 것이 보모 국가, 더 정확하게는 ‘치료요법 국가’다. 취약한 주체로서 국민은 집단과 국가의 관리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격하된다.

“지금 우리는 계몽주의 이전 시대의 미숙한 자아 상태로 퇴보되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체로 간주하는 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의 복원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진정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느냐는 문제이기도 하다. 공포 정치의 ‘악몽’에서 빨리 깨어날 필요가 있다.

■ 플라톤의 <국가>: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초기, 중기, 말기 대화편으로 나누어진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직후에 나온 초기 대화편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그랬음직한 모습을 가장 근사하게 보여주는데, 그의 논박문답법을 이용하여 거의 전적으로 윤리적인 문제에 집중한다. 중기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고유의 변별적인 목소리와 철학적 외양을 보여주고, 소크라테스란 인물은 점점 그의 대변자가 되어간다. 플라톤이 중기에 제시하는 다수 이론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형상이론은 도덕적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객관적 진리가 없다는 궤변론자들의 도전과 억지 주장에 대한 대응이며, 우리가 주변에서 감각하는 자연세계 이외에 또 다른 실재의 영역을 제안한다.



<국가>는 플라톤의 사상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제1권은 전형적인 초기 대화편의 구조를 고수하기 때문에 원래는 초기의 독립적인 대화편이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그렇다면 제목은 ‘트라시마코스’). 여기서 플라톤은 ‘올바름’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소크라테스에게 논박문답법을 이용하게 하는데, 그 결과는 아포리아다. 제2권에서 그 질문을 다시 채택한 소크라테스는 이후 아홉 권에서 정의에 관한 이론을 철저히 파고드는데, 논박문답법을 사용하지 않고 설교로 일관하면서 간간히 제자이자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의 반론을 들어주고 의견을 제시한다. 제7권에서는 철학적 문답법이 악용되면 위험하며 올바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

는 나이가 되었을 때만 가르쳐야 한다고까지 경고한다. 후기 대화편은 매우 난해하고 논란의 소지가 크다. 플라톤의 가장 복잡한 철학적·논리학적 견해들이 포함되어 있다. 후기 저술 가운데 〈국가〉와 관련된 책은 마지막 저술로 보이는 〈법률〉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또 하나의 이상적인 국가이고 전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은 지니고 있으나 〈국가〉에서 그려진 국가와는 크게 다르다. 〈국가〉에서는 올바른 통치자들을 가진 도시에서는 법이 불필요하다고 암시했지만 이 책에서는 법치의 가치를 강조한다.

▷나쁜 정체들: 소크라테스는 최선자 정체와 다른 주요한 네 가지 나쁜 정체로서 명예지상정체(명예지배정체), 과두정체, 민주정체, 참주정체를 든다. 이러한 정체들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에서 생기며 정체들에 상응하는 개인들의 유형이 있음에 동의하고서는, 성격들이 개인보다는 정체들에서 한결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란 이유로 먼저 정체들의 성격을 살펴본 뒤 개인들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가장 올바른 사람과 가장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행복 및 불행과 관련해서 대비시켜 파악하기 위함이다(544c-545c).

첫 번째로 그는 명예지상 정체의 성격을 고찰한다. 우선 정체는 관직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 안에서 내분이 생길 때 바뀌게 된다. 이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무사(Mousa) 여신들께 기원해서 이들의 말씀을 듣는 형태로 제시된다. 이에 따르면 수호자들이 적기가 아닌 때에 신부를 신랑과 동숙케 할 때 훌륭한 성향을 지니지 못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된다. 그 결과 수호자들이 무사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황금족·은족·청동족·철의 종족을 감별해내지 못해 이들 성분이 뒤섞임으로써 조화롭지 못한 불규칙성이 생기고 내분이 일어나게 된다(545c-574a). 통치자들의 내분 끝에 최선자 정체와 과두정체의 중간선에서 성립한 것이 명예지배정체이며 이런 정체는 두 정체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 정체는 최선자 정체를 흉내 내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보다 걱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더 단순한 사람들이 관직을 차지하게 되고, 전쟁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두정체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연히 재물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이 정체는 혼합적인 것이지만 걱정적인 것이 우세한 탓에 승리에 대한 사랑과 명예에 대한 사랑만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정체에 일치하는 사람의 성격은 승리를 좋아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나 한결 고집스럽고, 다소 덜 시가(詩歌)적이고, 변론술에 능하지 못하며, 노예들에 대해서는 가혹하지만 통치자에 대해서는 지극히 순종적이다(547b-550b).

다음으로 과두정체가 언급된다. 명예지배정체에서 과두정체로 옮겨가는 것은 탐욕적 요소가 정점 증대 되기 때문이다. 과두정체는 훌륭한(덕)보다 부가 사회적 평가의 기준이 되며, 자산액에 따라 관직을 배분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런 나라는 하나가 아닌 두 나라, 즉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와 부자들의 나라이다. 또한 서로에 대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나라이며, 통치자들은 적보다 무장한 대중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전쟁도 할 수 없는 나라이다. 가장 나쁜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팔고, 다른 사람은 이 사람 것을 사서 갖는 것이 허용되어 결국 다 판 사람이 빈털터리가 되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이 정체에서는 거지와 범죄자로 가득 차게 되고, 통치자들은 이들을 조심스레 힘으로 제압한다. 과두정체를 닮은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한때 장군이나 높은 관직을 맡고 있다가 무고로 사형되거나 추방당하는 것을, 또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일체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겪을 때이다. 그는 가난으로 인해 명예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탐욕스레 돈벌이로 전향하여 재산을 모으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한마음이며 혼의 참된 훌륭한”이 없다(550c-555a).

과두정체에서 민주정체로 바뀌게 되는 것은 부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때문이다. 과두 정체 통치자들은 부의 힘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낭비를 부추겨서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은 한층 더 부유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혁명을 열망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겨서 다른 편 사람들을 죽이거나 추방한 다음, 나머지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시민권과 관직을 추첨에 의해서 배정할 때 민주정체가 수립된다. 이런 나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바를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이 정체에서는 온갖 부류의 인간이 생겨나서 정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민주정체는 “즐겁고 무정부 상태의 다채로운 정체이며, 평등한 사람에게도 평등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종의 평등을 배분해주는 정체”로 언급된다.

이어서 민주정체적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지가 언급된다. 먼저 과두정체적 사람의 아들은 필요한 것 이외의 모든 낭비적이고 하고많은 즐거움을 억제하도록 양육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런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인색한 과두정체적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가 온갖 종류의 다채로운 쾌락을 제공할 수 있는 자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의 내면에서 민주정체로 향하는 변화의 싹이 자라게 된다. 이 젊은이의 혼에 있는 과두정체적인 쪽과 민주정체적인 쪽이 내분을 겪다가 그의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무지로 민주정체적인 욕구들이 득세하게 되면, 이것들은 청년의 혼의 성체를 점령하게 된다. 이들은 ‘오만 무례함’과 무정부 상태, 낭비성,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를 들어오게 하여 이것들을 찬양하고 미화한다.

이런 “삶에는 아무런 질서도 필연성도 없지만 이 삶을 즐기고 자유로우며 축복 받은 것이라 부르며 평생토록 이 삶을 살아간다.”(555b-561e)

민주정체에서 참주정체가 어떻게 생기는지가 논의되면서 무엇보다 자유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다른 것에 대한 무관심이 민주정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이 지적된다. 민주정체에서 참주정체로 이행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민주정체의 구성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본다. 한 부류는 게으르고 낭비적인 부류로서 수벌에 비유되는데, 이들 중에서 제일 사나운 무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 민회를 조종한다. 두 번째 부류는 수벌들의 먹이가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류는 민중(demos)이다. “이들은 손수 일을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산도 그다지 많이 갖지 못한 모든 사람”으로서 이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면 민주정체에서 최대다수가 되며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첫 번째 부류 가운데 ‘앞장 서는 자들’이 가진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대부분은 자신들이 차지하고는 나누어 주는 몫에 만족한다. 민중은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어떤 한 사람을 선도자로서 앞장서게 하여 그를 따른다. 이 사람은 민중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자신의 경호대를 요구하고, 결국 모든 적을 타도한 뒤 완벽한 참주가 된다. 그는 민중이 지도자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전쟁을 일으키고, 그에 대해 음모를 꾸미지 못하도록 민중을 가난하게 만들어 생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시민들에게서 더욱더 미움을 사게 되며, 외국의 용병이나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경호원으로 삼는다. 이런 정체는 결국 민중의 세금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민중은 가장 가혹한 노예들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562a-569c).

마지막으로 참주정체적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의 삶의 방식은 어떤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소크라테스는 욕구들을 더 세분하여 ‘불필요한 즐거움과 욕구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불법한 것들’로 구분한다. 민주정체적 아버지에게서 양육된 아들이 “완전한 자유라 불리는 것은 불법에 인도되어” 욕정(에로스)이 광기의 경호를 받으며 미쳐 날뛰는 참주적 인간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런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 언급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에로스가 참주로서 그 사람 안에 거주하게 되어 그 혼의 모든 걸 조종하게 되면” 많은 무서운 욕구가 매일 밤낮으로 자라게 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자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고, 욕구들에 쫓기어 부모 재산을 도둑질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폭력까지 휘두르고 부모를 종살이하게 한다. 강도질이나 신전을 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민중의 어리석음 때문에 참주가 탄생한다. 참주적 인간은 자유도 불변한 우정도 영원토록 맛보지 못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가장 올바르지 못하고 비천한 자이다.(9권 571a-576c)

